

“광주와 호남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일하는 정치’로 보답”

■ 인터뷰-박군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에게 듣는 ‘법치와 공동체, 그리고 광주의 미래’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지도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인정적으로 뒷받침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넓혀 갈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긴밀하게 호흡하며 주요 정책과 국가적 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뿐 아니라 중도층의 마음까지 얻어야 합니다. 다음 총선의 승리와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만들 수 있는 통합적 리더십이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와 검찰 간부를 지낸 경험에서 볼 때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는 무엇입니까?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에 집중해 있던 권한을 분산한 것은 중요한 성과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인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나 범죄피해자 보호, 국민의 인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세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공극적인 기준은 기관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안전이어야 합니다.

▲AI 시대에 가장 시급한 법적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와 허위영상물은 개인의 인격과 존엄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제작뿐 아니라

유통과 소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플랫폼의 기술적 차단 의무도 보다 촘촘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동시에 지나친 규제도 AI 산업의 혁신을 위축시켜서 안 됩니다. 개발자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산업 경쟁력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예

하고, 전력과 용수 등 필수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대기업 한 곳을 유지하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함께 들어오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광주 군공항 이

전과 산업단지 조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 개정과 제도 정비에도 힘쓰겠습니다.

광주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거점이 되려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기업과 지역 사회가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토론과 협치의 문화도 필요합니다. 정치는 갈등을 키우는 일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광주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거점이 되려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기업과 지역 사회가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거점이 되려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기업과 지역 사회가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거점이 되려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기업과 지역 사회가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거점이 되려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기업과 지역 사회가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거점이 되려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기업과 지역 사회가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거점이 되려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기업과 지역 사회가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거점이 되려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기업과 지역 사회가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거점이 되려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기업과 지역 사회가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거점이 되려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기업과 지역 사회가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거점이 되려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기업과 지역 사회가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거점이 되려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기업과 지역 사회가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거점이 되려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기업과 지역 사회가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거점이 되려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기업과 지역 사회가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22대 국회개원 플래카드 앞에 선 박군택 의원.

이 있다면 피하기보다 먼저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신앙적 양심이 충돌한다면 결국 양심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정치적 명분을 만드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더 엄격하게 돌아보게 하는 기준이어야 합니다.

▲끝으로 미션리 창간 27주년을 맞아 독자들과 광주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광주 군공항 부지의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필요한 규제를 풀고 제도를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는 관련 TF와 관계기관 협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정치는 결국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광주와 호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시민들이 다시 신뢰할 수 있도록 ‘일하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글=이박형 본지 주필



박군택 의원이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의원이 참모진과 함께 민생현장을 돌아보고 있다.



청년들과 함께 국민건강 민생회복을 외치고 있는 박군택 의원.

성명서

광복 81주년, 기후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나라를 세우자

광복은 빛을 되찾았다는 뜻이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일제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와 주권을 회복했다. 우리는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민중의 희생을 기억하며 깊은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광복 81주년을 맞은 오늘도 우리의 광복은 완성되지 않았다. 민족은 해방되었지만 남과 북은 분단되었고, 한반도는 세계에서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다. 주변 강대국의 이해가 충돌하고 막대한 군사력이 집중된 현실 속에서 남북은 여전히 서로를 겨누고 있다. 전쟁을 끝내지 못한 분단체제에서 맞는 광복은 우리에게 ‘절반의 광복’을 넘어 평화의 나라를 이루라는 역사적 과제를 일깨운다.

국가는 영토·국민·주권으로 이루어지며, 헌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저출생과 지역소멸은 공동체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기후위기는 국토와 국민의 일상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 가뭄과 폭우, 폭염과 산불이 반복되면서 재난은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 가고 있다.

이번 광복절 연휴 남부지방을 뒤흔친 폭우는 그 위기를 선명하게 보여 주었다. 거제에는 한 시간에 124.5mm, 통영에는 97.4mm의 비가 쏟아져 모두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이를 거제에서는 200년 빈도, 통영에서는 100년 빈도의 극한호우로 분석했다. 8월 15일부터 17일 오후 1시까지 거제에는 851.1mm, 통영에는 704.8mm가 내렸다. 여름 한철 평년 강수량의 약 90%가 사흘도 되지 않아 쏟아진 것이다. 부산 가덕도에도 시간당 101.5mm가 내렸고, 전남 목포·해남·진도에도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주택과 상가, 도로가 침수됐다.

더 두려운 것은 불과 며칠 전까지 이 지역이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다는 사실이다. 8월 1일 기준 전국 48개 시·군에 가뭄가뭄이 발생했고, 최근 6개월 전국 강수량은 평년의 82.3%에 머물렀다. 경남의 최근 6개월 강수량은 평년의 약 60%, 7월 강수량은 23%에 불과했다. 경남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광복절 연휴 직전 32.2%까지 떨어졌다.

밀양·거제·함안·의령·창녕은 농업용수 가뭄 최고 단계인 ‘심각’에 들어갔다. 일부 저수지는 저수율 0~1%로 바닥을 드러냈고, 경남의 가뭄 피해 농경지는 2천ha를 넘어섰다. 섬과 산간마을에서는 제한급수와 병물 공급

이 시행됐다. 울산의 7월 강수량도 28mm로 평년의 약 12%에 그쳐 1932년 관측 시작 이후 가장 적었다. 물이 없어 논밭이 타들어 가던 땅에 며칠 뒤에는 감당할 수 없는 물이 쏟아진 것이다.

가뭄과 폭우는 서로 다른 재난이 아니다. 뜨거워진 지구로 인해 흔들리는 물순환이 드러낸 두 얼굴이다. 최근 50년간 우리나라의 시간당 50mm 이상 호우 발생일은 연평균 12일에서 21일로 약 75% 증가했다. 특정 폭우를 기후 변화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따뜻해진 바다와 대기가 더 많은 수증기를 공급하고 극한 가뭄과 폭우의 위험을 키운다는 과학적 경고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에 건강한사회와교회포럼은 촉구한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피해 주민과 농어민의 생계와 영농 회복을 책임지고, 100년·200년 빈도의 극한강수에 맞춰 하천·저수지·배수시설과 산사태·침수 방재 기준을 전면 재설계하라.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 기후적응 예산을 국가 생명안보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라. 남과 북도 군사적 대결을 넘어 기후재난·산림·수자원 등 공동 대응하는 한반도 생명평화 협력체계를 마련하라.

한국교회는 재난을 피해자의 죄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돌리는 언어를 경계해야 한다. 피해 이웃의 구호와 복구, 교회 공간 개방, 탄소 절감과 생태적 전환으로 창조세계를 돌보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치적 주권을 되찾는 것이 첫 번째 광복이었다면, 분단과 전쟁, 지역소멸과 기후재난으로부터 생명을 지켜 내는 일은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할 또 하나의 광복이다. 광복 81주년, 이제 우리는 평화의 빛, 생명의 빛을 되찾아야 한다.

2026년 8월 17일

건강한사회와교회포럼 일동
상임대표 이박형